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 치 경

어느덧 12월이다. 나라 안팎에서 크고 작은 일이 그치지 않았지만 흐르는 시간은 막을 수 없는 일. 엊그제 등장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거리는 연말 분위기다.

2008년 지구촌에서 시끄러웠던 나라를 꼽으라면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초 이념적 토대와 지지기반을 확연하게 달리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나라가 소란스러웠던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다. 지난 1년여 동안 여론을 반영하며 항간에 떠돌았던 '신조어'를 나열하면 '2008 대한민국'을 재구성할 수 있다.

'고소영'에서 '만수무강'까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는 첫 조각 후보군을 지칭하는 '고소영'(고려대·소망고회·영남 출신),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가 등장, 서민들과의 위화감이 커졌다. 당시자는 극구 부인하지만 모든 일은 대통령의 형으로 통한다는 '만사형통'(萬

事兄通)이 대접집 말 안주로 차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대의 행진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로 층을 이룬 '멸박산성'이 서울 도심에 출현했다. '주야야박'(晝

언제까지 우이독경(牛耳讀經)?

李夜朴·낮에는 이명박, 밤에는 박근혜)은 양대 계파로 갈라져 있는 한나라당 내 역학 구도를 함축한다.

하반기의 학우는 단연 경제난이었다. 미국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여파로 나라 경제가 위험거렸지만 끄떡없이 버텨온 강민수 기획재정부장관을 빗댄 '민수무강'(萬殊無疆·민수·아자씨는 무강)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곤경에 처함이 회자 됐다. 강민수 장관과 그의 경질론을 일축한 이명박 대통령을 패러디한 '리만 브러더스'

(LeeMan Brothers)도 생겨났다.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자 직장인들 사이에는 'R(Recession·경기침체) 공포', 'D(Depression·공황) 공포'에 'J(Jobless·실직) 공포'가 번졌다.

대부분 정부와 국민의 거리감을 풍자하는 신조어가 난무하는 사이 지방도 정부와 크게 불편해졌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중용하고 비논리적인 지역정책 구상을 내놓고도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에게 이명박 정부를 향해 올해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수도권에 질식당하고 영남권에 뒤진 호남권의 또 다른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점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오히려 호남권은 세계 경제질서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및 인도, 동남아 시장과 가까워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벌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태도 변화는 아직 없다.

일방통행은 이제 그만

정부는 한 술 더 떠 그동안 유지해 왔던 수도권 규제조치마저 완화했다. 더불어 지방재정에 큰 보탬을 주던 종합부동산세 까지 무역화시켜 지역민심을 들끓게 했다. 간접한 외침에도 정부가 '마이동풍(馬耳東風)'을 넘어 거꾸로 가자 지역민들은 서둘러 올라가 웅기대회를 여는 게 중요한 일 되어 버렸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 못지 않게 지역을 감싸안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별하다. 정부는 8일째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우이독경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주민들은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체육·여론매체부장unipark@kwangju.co.kr

시 설

광주 기아차 '감산경영' 파장 최소화를

기아차 광주공장이 주력 제품인 스포티지 생산라인의 임업과 특근을 중단하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광주경제의 주축인 기아차의 감산경영이 지역사회에 미칠 후폭풍이 걱정된다.

기아차의 감산은 수요 감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지역의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부분적인 임업·특근 중단으로 일부 협력업체는 납품 물량이 줄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경기가 장기간 호전되지 않으면 250여 협력업체의 구조조정과 휴업 및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니 안타깝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은 광주지역 제조업 고용의 25.9%, 총 생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차의 경영난이 협력업체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나락으로 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때처럼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여수박람회 '준비'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세계박람회 기구(BIE)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BIE는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박람회 준비기본계획을 154개 회원국의 의결을 거쳐 승인했다. 세계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국내외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한 것이다.

BIE의 여수박람회 승인은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다. BIE는 기본계획을 완벽한 것으로 평가했고 승인 시기 대비 박람회에 비해 1년 이상 빠르다. 빈센트 곤살레스로 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은 한국 민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높이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 박람회 개최국의 위상도 공식화됐다. BIE 협약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 받기 전까지는 개최국으로서의 활동이 금지됐지만 이제부터 참가국 대표 초청과 기업 유치 등 본격적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無等鼓

여원과 비교하면 22% 늘었다.

숙취해소 제품의 판매 증가에 대해 업계는 최근 솔루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주류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9월 소주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5.1%, 맥주는 5.3%, 위스키는 4.4%씩 각각 증가했다.

숙취해소 제품의 종류도 음료 형태만 있었지만 껌과 알약, 음료 등으로 다양해졌다. 한국아루르트는 최근 헛기나무, 오가피 등 10종의 한약 재료 만든 숙취해소 음료 '닥터제로'를 출시했다. 바이더웨이는 알약 형태의 숙취해소 제제 독점으로 들어와 판매를 시작했다. 숙취제거 껌과 아이스크림도 나왔다.

불황과 음주



어려운 시절, 화집에 또는 좋아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술 소비를 늘리고 숙취해소 제품시장도 성장하게 하는 모양이다. 연말, 송년행사와 겹쳐 더 많은 술자리가 예상된다. 신세대령이나, 즐기는 것 못지 않게 건강을 잊지 않는 것 이 더 중요한 일이다.

동아제약의 '모닝케어'도 지난달에만 22억원어치가 팔렸다. 지난해 10월(18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이 경 진

우리 정부는 지금의 에너지·환경 위기 및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여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고용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하지만,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원자력 확대에 대

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거쳐 받아먹겠다는 내용들이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란 마른 하늘에서 비내리기를 기다리기 내지는 지역 안에 차운에서 떠 하니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광주·전남 지역이 30년간 6기의 원전과 씨름하는 동안 경남·경북 지역에서는

'원전 보유 14기, 건설중 6기, 원전건설 계획 10기'를 비롯, 방사선폐기물 처분장 건설중, 암성가속기센터 건설 중, 동남권의 학원 건립 등 원자력과 관련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남권에 지밸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에너지복합도시를 향하여

한 일부 환경 단체의 반발과 국민적인 거부감을 의식해서 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에너지 자체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15%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만이 기술자립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국산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에너지 자립도

로서는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며, 경제성에 있어

서도 향후 50년까지는 원자력을 따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제성이 닥칠 원자력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미래의 에너지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하는 방식, 즉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발표에 이어서 각 지방 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이라는 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도 없고, 계획도 서로 베끼기 수준에 머물

원자력과 연계한 수소생산기술 개발, 원자력연구원 유틸리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더럽고 위험하다고 믿는 원자력 시설을 열심히 쟁겨가는 경남·경북 지역 정치인들이 바보들일까?

지역 감정에 기대서 우리도 원자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진 속에서도 원전을 55년이나 보유하고 있는 일본, 원자력 세계 6위의 기술력으로 낮은 전기요금 기조를 유지하게 한 우리나라,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프랑스는 제쳐놓고, 20년 전의 체르노빌 사고만 되뇌이는 낡은 생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에도, 아니 어떤 산업의 중심에도 설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우리 지역 지도자들이 합심,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광주·전

남지역의 협력의 조건을 연계, 최첨단 원자력 기술과 환경 기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에너지복합도시 개발과 같은 원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서 미 정

장애아를 키우는 아들 부부의 고통을 딛어주면서 71세 할아버지가 선천성 뇌기형으로 움직이기 조차 힘든 4살배기 손자를 살해했다. 장애 아동 양육으로 힘들어 하는 아들 부부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이유였다. "내가 먼저 가야되는데"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셨다고 한다.

이런 비극은 장애아동의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가정에만 돌리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정신적·경제적 시달림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한다. "울 엄마는요, 맨날 너랑 나랑 한낱한시에 같이 죽자고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너도 힘들고 가족들에게도 계속 짐

발생으로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의 정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이나 장애 정도, 가족의 대처능력, 지원활용능력, 가족의 기능 등 공통적으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안에 긴장감이 둘고 갈 등을 느끼게 되며 위의 사례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국가가 나눠져야 한다.

인간은 생애주기를 통해 발달하는 과정마다 과제와 도전과 역할 등을 가지고

8기구 중 1기구는 장애인 가구

이라고요."(1급 뇌병변장애인의 말)

가족은 혈연관계로 결합된 사회의 기초집단이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떠어져 있고 가족구성원끼리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과 평안을 기대한다.

그러나 장애아의 출생이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중도장애인인 출현하게 되면 가족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현실에 대한 공포와 대처방안에 혼란을 경험하면서 가족 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05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조사대상 1천586만4천가구 중 194만 4천가구로 장애인가구 출현율은 12.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8기구 중 1기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샘이다.

우리 사회에서 후천적인 장애인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뤄봤을 때 장애인 가족의 비율이 더 높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 가족의

2008년 3분기 수상자

있는 우리 토종쌀을 개발해 쌀국수 시장을 베트남에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웨빙을 외친다. 우리 주식이면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쌀만 큼 출렁한 웨빙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언젠가 언론보도에서 맛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배를 중단한 우리나라 '통일쌀'이 국수용으로 적합하다고 들었다. 이 쌀은 생산량도 많고 죽득한 성분까지 풍부하다고 한다. 이를 쌀국수용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재배한다면 우리 쌀의 새로운 시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순애·광주시 북구 총효동

학력 세습 우려, 고교 평준화 유지돼야

요즘 일부 대학이나 사회단체, 서울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3불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1974년 도입됐던 고교 평준화는 물론 일부에선 학력 저하, 학교 선택권 박탈, 우수학생 교육 미흡 등을 지적하지만 아직은 순기능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사실 평준화는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과열

과외를 진정시켜 국민들 대부분이 지지하는 정책이다. 또 지나친 성적 서열화를 억제시킨 역할도 부인 못할 것이다. 평준화를 폐지한다면 초중학교 시설부터 과외전쟁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양극화로 인해 학력 세습이 부 세습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평준화는 유지돼야 한다.

▲송희수·니주시 송호진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	------------------